Vol. 32
AUGUST 2020

ISSN 2671-7352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정부혁신과 공공부문의 혁신」

특별대담
미래사회에 대비한
성공적인 정부혁신 전략을 모색하다

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 방향은?

논단
- 지방의회 의정비 혁신 방향
-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역량 내재화를 위한 제언
- 사회적가치와 공공부문의 혁신

지방의회
- 자치분권은 깐깐한 견제와 대안 등 큰 협치에서 시작된다

우수사례
남원시, 혁신을 디자인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ONTENTS

2020 **AUGUST** VOL.32

Cover story



8월호 표지는 '정부혁신과 공공부문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조사·연구하고,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정책개발 추진으로 자치분권 제도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따뜻한 모음국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04

특별대담

04 미래사회에 대비한 성공적인 정부혁신 전략을 모색하다
정상훈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민참여협력관

이슈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 방향은?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단

26 지방의회 의정비 혁신 방향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32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역량 내재화를 위한 제언
이병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팀장

42 사회적가치와 공공부문의 혁신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통권 제32호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윤태범
편집위원장 최인수
위원 김봉균, 김성주, 김정숙, 김지수, 박승규, 윤성일, 이효, 전대욱, 전성만
간사 탁영지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연락처 전화 033-769-9626 이메일 research@krila.re.kr
홈페이지 www.krila.re.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기 발행하는 소식지로 지방자치의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지방자치이슈와포럼은 격월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research@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제서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 견해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46 자치분권은 깐깐한 견제와 대안, 통 큰 협치에서 시작된다
이해양 무주군의원

입법동향

56 특례시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수사례

62 남원시, 혁신을 디자인하다!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68 강원도 인제군, 살맛나는 농촌 1번지 꿈꾸다

KRILA 인포그래픽

72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국민들의 생각을 묻다

76 뉴노멀 지역相生을 찾아서

트렌드 카페

82 행복을 위한 일탈 부캐를 아시나요?

84 연구원 동정

88 KRILA 보고서



정상훈

現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민참여협력관

경력

- 2010-2012 함께일하는재단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센터장
- 2012-2013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 2013-2015 사회혁신공간 'There' 상임이사
- 2015-2016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 2017-2018 청와대 사회혁신 비서관실 행정관
- 2018-현재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협력관

미래사회에 대비한 **성공적**인 **정부혁신 전략**을 모색하다

Interviewee : 정상훈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민참여협력관
Interviewer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Q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의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을 위해 만든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확산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요 기능은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저는 2018년 11월, '국민참여협력관(국장)'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국장님께서는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정부에서 혁신업무를 추진하셨는데, 혁신의 정의는 무엇이며,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에서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혁신이란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방법으로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방법은 새로운 분야 간의 연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조직일 수도 있고, 시민참여, 협력 및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구성원과 관계자들 간의 참여와 협치를 위해서 혁신을 추진하게 되는데 공공혁신은 동력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혁신은 시스템의 전환 같은 하드웨어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자발적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해법이 아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혁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놀이로 유명한 'LEGO(레고)'라는 장난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얀센이 1932년 덴마크에서 창업하여 가족경영 형태로 유지



했는데, 2003년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레고는 창업 이후 처음으로 외부인 CEO 예르겐 빅 크누드스토프를 선임했습니다. 그는 레고의 주요 고객들이 아동들이지만 의외로 열성 고객인 성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인고객이 전체시장의 약 5%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출액은 아동고객들의 20배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때부터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장난감 개발단계부터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개발부서에 전폭적인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와 빠른 의사결정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상품 출시로 이어졌으며, 2015년 레고는 다시 '마텔(Mattel)'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로 부활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수용력과 흡수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혁신은 자발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올레길'은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참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레길은 사라진 옛길을 찾고, 사유지는 올레가 소유하지 않되 통과하도록 조율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 때는 군, 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와 협력한다는 주요 원칙을 고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금의 올레길이라는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코스를 만들었습니다.

Q__ 그렇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부혁신의 개념과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__ 정부혁신은 정부 역할과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행위라고 대개 정의되는데, 저는 효율성은 혁신이라기 보다 모든 업무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혁신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변화, 획기적 변화를 구체적 현실로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정부혁신은 공무원 스스로 혁신이 일어나도록 행정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참여, 협력, 실험과 연결 등 일하는 방법을 새롭게 해서 난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혁신의 결과는 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하는 정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방법을 새롭게 하는 대표적 방법은 디지털과 공동창조가 있습니다.

디지털은 우리 사회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시대(Digital Transformation)'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정부 정책에 접목하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더욱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수도검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수도검침이란 기존 검침원들이 분기별로 방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에서 활용토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 시스템을 연계·구축한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 검침원들이 관찰한 정보를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자들과 K-water의 복지서비스와 연결하여, 실시간 스마트 수도 검침을 통해 1일 취약 계층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되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창조는 협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부여로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은평구는 전체 예산의 80%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단순 의견 개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관 예산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행정의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계, 착공 등 준공 전에 현장의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주민들의 참여 보장을 실질화했다고 봅니다.

66

공동창조는 협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부여로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된다고 봅니다.

99



행정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으로는 창조적 조직운영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 내에는 '사일로 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 있는 각 부서가 다른 부서들과 소통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서 자기 부서 내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 간 이기주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허물지 않으면 진정한 협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와 인원이 참여하는 '벤처형 조직'을 통해, 부서 간 업무 벽을 허물고 시급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려는 창조적 조직운영이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창조적 조직운영은 부서별 업무분장, 사후책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조직형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직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자발적 동기부여, 업무집중 및 몰입도 향상, 그리고 상급자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Q___ 국민들이 이런 정부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비전, 전략과 그 성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A___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입니다.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회복'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및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간 양적 성장·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국가 운영 방향을 전환하여 인권, 환경 및 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① '사회적 가치 구현'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존 정책 제안, 민원 수준의 참여, 소수 전문가 위주의 참여 방식을 탈피하여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② '참여와 협력' 정부 구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습을 타파하고 혁신의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③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 1〉 정부혁신 비전·체계도



특히, 사회적 가치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바로 자원 투입과 배분의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예산·인사·조직·감사·평가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통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로 국내에 마스크 수급과 배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지난 3월에 혁신 제안목을 통해 '공공데이터 공개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그 제안요지는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를 빠르게 공개해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마스크 배포처(약국) 정보, 실시간 재고 상황 등 서비

스 제작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공개를 발 빠르게 결정했고, 곧바로 '마스크스캐너', '마스크알리미', '웨어마스크' 등 30여 개 서비스가 동시에 나오게 되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단키트 개발 등 선제적 대응,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협조 및 의료보건 인프라 개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의도치 않은 사고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동선 추적, 투명한 공개 및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보건당국의 조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66

지역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거버넌스 구조인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참여보장을 확대하였고, 주민 대표기구이자 민관협치 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기존 47개에서 2019년 말 기준으로 408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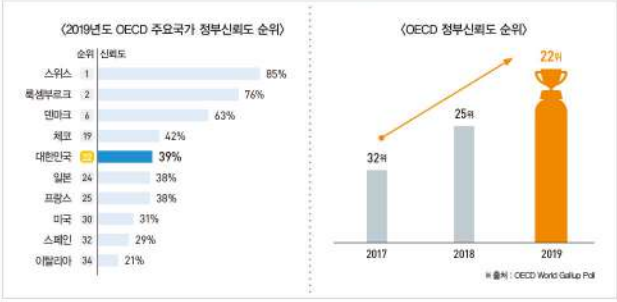
참여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은 민관협력을 위한 교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길, 배스 등 하천 생태계 교란종 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하여 해결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생태계 교란종 비료화를 위한 기술을 협력·개발하고 지역 상품화하여 외래어종을 제거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양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기존 탐방객들의 일회용품 쓰레기 증가 문제와 도시락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상을 전환하여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탐방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맞춤형 도시락 메뉴를 구성, 일회용품이 아닌 도시락 용기에 지역 식자재를 이용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등산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락 업체의 소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2020년 현재 전국 24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OECD 정부신뢰도 순위는 2017년 32위, 2018년 25위, 2019년에는 22위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2019년 기준으로 일본 24위, 프랑스 25위, 미국 30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부패인식지수(CPI)는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로 10년 만에 다시 세계 30위권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거버넌스 구조인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참여보장을 확대하였고, 주민 대표기구이자 민관협치 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기존 47개에서 2019년 말 기준으로 408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림 2〉 2019년 OECD 정부 신뢰도 순위



▶ 'K-방역'으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성공적인 대처의 결과로 에델만에서 조사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올해 1월(57%)보다 16%p 상승한 67%로 나타나,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역대 최고치 기록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업 '에델만' 정부신뢰도 조사(4.15~23,간 국민 1,200명 대상(5.10,발표)

〈그림 3〉 부패인식지수 순위



※ '유럽반부패기억람연센터(ERCAS)'가 발표한 '19년 공공청렴지수(C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아시아 국가 중 1위)로 '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각년 측정), '19년 "뉴웨위험패트리스" 증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평가

Q___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A___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은 국민 참여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그리고 3대 전략 실현을 위해 '정부혁신국민포럼'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국민으로부터 정부 혁신 관련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부혁신 제안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포럼 운영위원을 150명 내외로 위촉하여 포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럼운영의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포럼 대표단(포럼대표 포함 20명 내외)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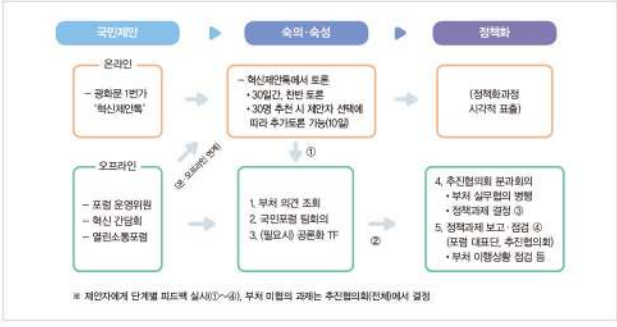
정부혁신 국민포럼 운영위원은 6개 팀(일반행정,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안전환경, 디지털)으로 구성되며, 정부혁신 제안 및 팀 회의(격월 1회)에 참석하여 정책 제안에 대한 숙의·숙성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중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민간전문가·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TF'를 열어 제안을 발전시킵니다.

〈그림 4〉 정부혁신 추진체계



다음으로, 국민참여와 범정부 협력에 기반하여 정부혁신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논의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 공공기관장 등 총 50명 이내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을 정부혁신의 목표와 전략을 관리하고 실적을 점검하며,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수렴한 혁신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정부혁신국민포럼이 국민의 의견을 받는 입구의 역할을 한다면,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혁신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 그 수레를 이끄는 주인도, 수레의 최종 목적지도 국민인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부혁신인거죠.

〈그림 5〉 포럼 제안관리 프로세스



특히, 일반국민 누구나 정부혁신 홈페이지(광화문1번가)를 통해서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제안을 등록한 후 국민 제안에 대해 30일간 찬반 토론(댓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 30명 이상 추천(다만, 30명 미만 추천이라도 중요도가 크거나 시급한 현안인 경우 운영위원이 정책토론 등을 거쳐 정책 아젠다로 연결할 수 있음)을 받은 경우, 정책과제화가 필요한 제안 및 오프라인(운영위원, 간담회 등)에서 발굴한 제안에 대하여 다음 단계인 부처의 의견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오프라인 간담회는 정부혁신의 목표인 '참여와 신뢰

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현장에서부터 답을 찾는다는 의미인 '참신현답(參信現答)' 국민제안 워크숍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혁신 공감대와 신뢰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국민포럼 운영위원 팀별회의와 대표단 회의를 통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발굴한 정부혁신 정책제안의 내용(혁신 여부, 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 및 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제안을 심의, 숙의·숙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화된 주요 제안은 데이터 개발을 통한 마스크 앱 개발과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혁신과제를 선정 및 성과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직접 참여 보장과 그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정부의 신뢰와 효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는 공무원들의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혁신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례기반형 정부혁신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혁신강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혁신 사례가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___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향후 정부의 역할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가야 되는지요?

A___ 코로나19 이후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복잡한 사회적 난제는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정부가 직·간접으로 나서서 빠르게 해결하고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큰 정부는 빠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큰 정부의 의미를 '선제적이고 현장성이 높은 능동적인 정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환경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능동적으로 수립하며, 기관·민간분야 등과 협력·연결을 통해 정책의 효능성을 높이는 정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운영할 조직은 기민하고 민첩하며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애자일(Agile)'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애자일은 민간 기업에서는 기업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직문화 변화나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그치



면 안 됩니다. 애자일이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조직, 인사, 평가 및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리더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빠른 판단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전폭적인 권한위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코, 현장 직원들에게 책임만 과도하게 부과되어서는 기민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상당한 권한과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에 대한 수시적인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는 학습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전환하여 도전하고 시도해보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를 말하며, 개방·공유·소통·협업의 가치에 기반을 둔 정부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와 경험 창출을 촉진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변화는 코로나 등 사회 환경 변화 속에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과 접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시도되어서 성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능동적이고 민첩한 정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로 탈바꿈한 모습으로 성큼 우리 앞에 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66
마지막으로 정부는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를 말하며, 개방·공유·소통·협업의 가치에 기반을 둔 정부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 방향은?[1]

I 서론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코로나19가 2020년 상반기를 넘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역시 2020년 1월 19일 첫 감염 사례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감염병이 반년 넘게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확산을 보이는 현상은 그간 우리가 경험해 온 일반적인 형태의 감염병과 다르다.[2]

대한민국은 즉각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보여주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그에 부응하는 정부운영방식과 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0년 상반기가 지나가는 현시점에서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 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때이다. 특히 정부혁신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간

1) 본 내용은 2020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저자가 발표한"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의 방향은?"원고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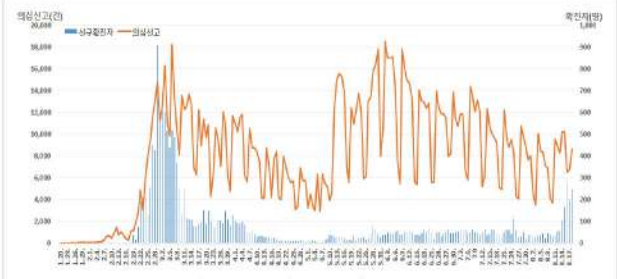
2) 최근 수도권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5년의 한번이라고 알려진 감염병 확산의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고, 2·3개월의 단기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통념은 무너졌다."라고 말했다(OO시 보건소 공무원 면담, 2020.06.).



의 정부혁신 방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적 변화를 검토하고,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림 1〉 코로나19 일일 의심신고·확진자 현황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작성일: 2020.08.18), "[8.18.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현황(정례브리핑)"

Ⅱ 정부혁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

1. 재난안전관리와 지방정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한 2020년 5월 10일 대통령의 연설문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대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보건·경제·산업·고용·안보 분야 등 5대 분야의 핵심적인 변화와 비전이 담겨 있는데, 이는 곧 이후 발표되는 각 부처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연계되었다. 대표적으로 보건분야의 질병관리청 신설, 경제분야의 기업지원 및 일자리대책에 대한 245조 원 투입, 산업분야의 디지털경제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 고용분야의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보분야의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전환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겠다(청와대 홈페이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경제·산업·고용 대책에 집중되어 있고 그 결과는 3차에 걸친 추경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는 각 부처 역시 관계부처 외에는 특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제시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산업·고용분야에 유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판단이 반영되었기에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발생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정부혁신의 전반적인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코로나19 주요 대응 일지

구분	분야	대책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 방향	보건분야	①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②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국회동의 시) ③ 감염병 전문병원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
	경제분야	① 기업지원 및 일자리 대책에 245조 투입 ② 소비진작, 관광회복 방안 모색 ③ 투자활성화 ④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세계의 산업지도 변화 등
	산업분야	① ICT, 바이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결합을 통한 디지털 경제선도(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 ② 한국판 뉴딜
	고용분야	①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보분야	① 군사안보 · 인간안보, 국제사회 선도

구분	1차추경(11.7조)	2차추경(7.6조)	3차추경(35.3조)
추경예산안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 · 중소기업 회복 민생 고용안정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세입경정 135조+α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패키지 – 내수수출지역 경제 활성화 – 한국판 뉴딜 – K-방역 및 재난대응

※ 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대응과 경제침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 사회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한 신용카드 업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사람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해 "SHOCK"이라는 이름을 명명했다(조선일보, 2020). 온라인 유통비중의 증가(Switching On-line), 집안·동네소비의 부상(Home-life Sourcing), 건강·위생·힐링에 관한 소비의 확대(On-going Health), 소비시간, 소비연령 등 구매방식의 변화(Changing Pattern), 디지털 경험의 확산(Knowing Digital) 등 다섯 가지이다(조선일보, 2020).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대 변화 8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① 보건환경: 간헐적 감염병 → 감염병 빈발, ② 경제환경: 대면 산업 → 비대면 산업, 석유수요 증가 → 석유수요 감소 및 친환경 전환, 글로벌 조달 → 로컬 조달, ③ 경영방식: 비용절감 및 효율 지향 → 재고확보 및 회복력 중요, ④ 사회가치: 개인과 효율을 강조 → 연대와 협력을 강조, ⑤ 교역환경: 자유무역 및 신자유주의 → 보호무역 등을 내용으로 한다(한의신문, 2020).

문화일보는 좀 더 넓은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몇 가지 트렌드 분석결과를 아우르고도 문화·환경·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를 포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① 빅·스마트 정부의 등장, ② 안보개념의 재정립, ③ 머나몰리시, ④ 네이션 퍼스트, 반 세계화, ⑤ 신공동체의식, ⑥ 탈 G2, ⑦ 전통적 국가경쟁력 평가기준의 재정의, ⑧ 전통적 국가경쟁력 평가기준의 재정의 및 서구우위의 균열, ⑨ 더 깨끗해진 지구, ⑩ 탈 도시화 가속, ⑪ 리쇼어링(기업유턴현상), ⑫ 홈루덴스 문화, ⑬ 원격교육의 활성화, ⑭ 비대면 산업 강화, ⑮ 스마트 오피스 활성화, ⑯ 전문가의 귀환 등 1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문화일보, 2020).

이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첫째, 큰 정부, 둘째, 탈세계화, 셋째, 비대면 사회, 넷째, 사회적 안전망, 다섯째, 회복력(Resilience)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재난대응과 경제부양, 방역체계 가동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용인되고, 이 과정에서 사생활침해·정부실패 등 큰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축소되었다. 세계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가 깨지고, 단절 속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특히 비대면 사회로의 급작스러운 전환 경험은 그에 따른 산업구조, 삶의 방식 변화로 이어졌다. 또한 개인의 경제력과 직업안정성 등의 차이에 따른 격차가 가시화되면서 건강·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재난 중 또는 재난 후 공동체와 정부가 재난이 가져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시도·협력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경험을 토대로 한 단계 높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림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변화(SHOCK)

- ✓ Switching on-line(온라인 유통비중 증가)
- ✓ Home-life Sourcing(집안·동네 소비의 부상)
- ✓ On-going Health(건강·위생·힐링소비 확대)
- ✓ Changing Pattern(소비시간, 소비연령 등에 따른 구매 방식의 변화)
- ✓ Knowing Digital(디지털 경험의 확산: 연령대 확대, 분야의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변화

- ✓ 보건환경(간헐적 감염병 → 감염병 빈발, 글로벌 조달 → 로컬 조달)
- ✓ 경제환경(대면 산업 → 비대면 산업, 석유수요 증가 → 석유수요 감소/ 친환경 전환)
- ✓ 경영방식(비용절감 및 효율 → 재고확보, 회복력)
- ✓ 사회가치(개인/효율 → 연대/협력)
- ✓ 교역환경(자유무역/신자유주의 → 보호무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 변화

- ✓ 빅·스마트 정부(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개입의 용인 vs. 사생활침해)
- ✓ 인보개념의 재정립(전쟁이 아닌 인간 자체가 안보의 궁극적 목표로 변화)
- ✓ 머니폴리시(각국 정부의 역대 최대 돈풀기)
- ✓ 네이션 퍼스트 & 반세계화(자국이익 최우선, 각국 도생 시대 도래)
- ✓ 신공동체 의기 속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
- ✓ 달 G2패권국 리더십의 상처로 인한 다극체제)
- ✓ 전통적 국가경쟁력 평가 기준의 재정의(선진국=재난대응력?)
- ✓ 서구 우위의 글로벌 질서한 의료시스템의 민낯으로 선진국 신화 깨져)
- ✓ 더 깨끗해진 자구(인간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확인)
- ✓ 탈 도시화(패적한 교외에서 에코로지 라이프 강화)
- ✓ 리쇼어링(기업유턴) vs. 글로벌 벨류체인(다국적기업의 국제 공급망 체계 재편)
- ✓ 홈루덴스 문화(다중밀집지역을 회피하고 집에서 놀고 즐기는 인간, 랜선 공연관람)
- ✓ 원격교육 활성화(온·오프라인 혼합 러닝 증가)
- ✓ 비대면 산업 강화(5G 네트워크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
- ✓ 스마트오피스 활성화
- ✓ 전문가의 귀환(집단지성보다 전문지식과 조언에 의존)

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3. 현행 정부혁신의 방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 비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는 현행 정부혁신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다음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정부혁신추진체계도에 나타난 정부혁신의 방향은 대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비대면 사회 도래에 대

한 대응 및 사회적 회복력 제고 방안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범정부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시급성 높은 경제·고용·산업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던 정부혁신의 방향은 비대면 사회의 확대로 인해 증대한 한계에 부딪쳤다. 직접적인 대면과 소통, 접촉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숙의와 참여, 연대를 강조해 온 정부혁신의 방향은 비대면 사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과의 면담에서는 "그간 이루어온 공동체 형성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을 느껴 안타깝다."라는 점과 "그간 대면·접촉·소통·연대를 강조해 온 정책방향을 바꾸어 비대면·비접촉을 안내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활동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모순을 경험했다. 화상회의 등 디지털 방식의 공동체 형성 방안 등에 대해 여전히 낯설고 어려워하는 주민들이 많다."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했다(서울 OOO구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 면담, 2020.6). 즉,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와 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시민참여와 공동체형성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난과 환경변화 속에서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의 방책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을 비롯해 정부와 시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으로 신속하게 채택하는 시스템은 적극행정·국민제안 제도의 의미를 강조하는 예시이다.

〈그림 3〉 2020 정부혁신추진체계도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0

Ⅲ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부혁신의 방향

1. 주요 쟁점과 코로나 경험에서 도출한 정부혁신 필요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정부혁신의 방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비교해 보면 크게 6가지의 쟁점이 나타난다.

첫째, 비대면 문화의 확대와 소통·참여·공동체의 문제이다.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시민참여 등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소통과 접촉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서 어떻게 재정비될 것인가?

둘째, 빅·스마트정부의 확대와 사생활보호·민간거버넌스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공중보건의 중대위험으로 인해 활용된 개인의 동선공개, 출입 QR코드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개 가능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감염병에 대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확대된 정부의 역할범위를 향후 어느 선에서 머물게 할 것인가?

셋째, 세대 간-지역 간-계층 간 격차 확대의 가능성과 사회통합의 문제이다. 코로나 19 경험 속에서 가시화된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격차, 소득계층·직업군 간의 안정성 격차 등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디지털산업의 강화과정에서 예측되는 독과점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넷째, 경제활성화와 환경보호의 문제이다. 코로나19에 따라 검증된 산업·경제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경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속에서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섯째, 지방분권과 국정통합성의 문제이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체계 및 국가예산투입의 필요성을 경험하였는데, 이후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될 경우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 것인가?

여섯째, 정부의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및 국민제안제도 강화 필요성의 문제이다. 정부의 위기대응역량 강화는 공무원 스스로의 적극행정과 시민의 제안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6가지 쟁점에 대해 코로나 경험을 통해 도출한 정부혁신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상에서 시민이 활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게시판 형태를 넘어 숙의, 화상회의, 토론이 가능한 구조로 발전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속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유형별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체계화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재난상황에서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체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재난대응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확대되면서 그간 정부와 시민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육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희석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모금·자원봉사를 넘어 시민사회가 재난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직업안정성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직업군별 직업안정성과 디지털 세대격차가 생존능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편차의 가시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 기능배분,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조세부담 배분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이 쟁점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디지털 산업 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의 증가, 글뚝산업의 국내유턴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물류·유통 정상화에 따른 대기오염·미세먼지의 문제 등을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

66

넷째, 직업안정성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 기능배분,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조세부담 배분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이 쟁점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99

여섯째, 1차 재난대응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강화, 재난대응 인력·예산확보의 자율성 강화, 사회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내 재난안전담당부서와 개별재난담당부서 간 보고체계 일원화,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대응체계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일곱째, 주민과 1차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 역량이 행정서비스 만족과 직결되는 지금 적극행정을 위한 재량권의 확대, 적극행정 유인정책 및 교육 강화,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평가 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여덟째, 국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제도설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66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플랫폼과 API 방식 연계를 통해 어떤 플랫폼을 국민이 활용하더라도 통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상회의 및 온라인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비대면 사회에서 시민들이 소통과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9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 제안

앞서 제시된 주요 쟁점과 정부혁신 필요사항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변화는 물론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정부혁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강화를 통한 비대면 국민참여 및 공동체 형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플랫폼은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이용자의 효용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플랫폼에 활용이 집중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제안을 위한 플랫폼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해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플랫폼과 API 방식 연계를 통해 어떤 플랫폼을 국민이 활용하더라도 통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상회의 및 온라인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비대면 사회에서 시민들이 소통과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단위의 참여·활용 수요가 높은 보육, 교육, 사회적경제, 공동체, 일자리, 로컬푸드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이용을 위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공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보험적용범위의 확대, 증세, 국민연금, 사무배분 및 재정분권 등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공론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



가 있다. 정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충족 및 정제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소수의 전문가에 의한 설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지만,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금융·소비·문화생활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기 위한 교육강화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기 보급 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적극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적극행정은 그간의 공무원 행동패턴을 변화시키고 혁신행동을 유발해야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인데, 특히 사후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창의적인 정책제안 등을 주저하는 문화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이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채택·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채용 유인책을 개발하고, 재난대응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직 외 재난관련 전문분야의 공무원(예: 산림, 환경, 보건 기술직 등)의 채용확대와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충원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정비 혁신 방향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지방의회 의정비의 의의와 연혁

1) 의정비 개념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②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③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

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의정비로 통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1항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통하여 유추해볼 때, '의정비'의 개념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객체로써 임의적으로 설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변화

지방의회의 유급직제 제정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회의 역할을 정책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2005년 6월 월정수당제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지방의원의 회기 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개정되었다.

〈표 1〉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91	일비, 여비 지급
1994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보조기(광역), 여비, 회기수당
1999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보조기(광역), 여비, 회기수당
2003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보조기(기초에 확대), 여비, 회기수당
2005	월정수당제 도입
2008	월정수당의 가이드라인 도입
2014	의정비의 결정절차 간소화

그 후 2018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II.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정비 현황

2018년,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 총 평균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시도 및 시군구 의정비 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결정액(조례)			결정액(조례)			전년대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A)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B)	금액(B-A)	인상률(%)
총 평균	2,841	1,354	4,195	2,944	1,354	4,298	103	2.5
광역(평균)	3,943	1,800	5,743	4,037	1,800	5,837	94	1.6
기초(평균)	2,538	1,320	3,858	2,634	1,320	3,954	96	2.5

의정활동비는 총 평균 1,405만 원이며, 광역 1,800만 원, 기초 1,320만 원이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 총액은 평균 4,305만 원이었으며, 광역의 경우에는 5,837만 원, 기초는 3,95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의정비 총액(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합)의 차이가약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경우 총액의 경우 2.6%가 인상되었으며, 광역의 경우 1.6%, 기초의 경우 2.5%가 인상되었다.



〈그림 1〉 광역자치단체별 월정수당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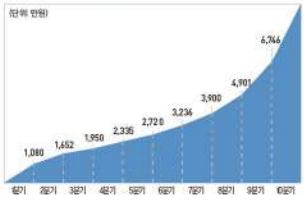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 간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적으며 이들 자치단체 간의 차이는 약 1,2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의정비 상위에 있으며, 전라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이 의정비 하위에 포함되어 있다.

1) 민간기업 급여와의 비교

'17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475만 원, 상위 10% 커트라인에 위치한 근로자의 연봉은 6,746만 원 이상, 상위20%는 4,901만 원 이상, 상위 30%는 3,900만 원 이상, 상위40%는 3,236만 원 이상, 상위50%는 2,72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봉분위별 근로자 연봉 하한액(커트라인) 현황 ('17년)

연봉분위 (상위%)	연봉하한액 (만원)	연봉분위 (상위%)	연봉하한액 (만원)
10분위 (0~10%)	6,746	5분위 (50~60%)	2,335
9분위 (10~20%)	4,901	4분위 (60~70%)	1,950
8분위 (20~30%)	3,900	3분위 (70~80%)	1,652
7분위 (30~40%)	3,236	2분위 (80~90%)	1,080
6분위 (40~50%)	2,720	1분위 (90~100%)	72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18.11.19.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은 소득 8분위 수준이며,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9~10분위 수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평균은 8~9분위에 위치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17년 기업규모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 정규직 6,46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3,58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공기관과의 비교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연봉은 67,984천 원,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68,88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연봉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광역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은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의 약 86% 수준이며,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은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의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의정비 혁신의 방향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원의 업무를 고려할 때 업무의 난이도나 전문성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대상이 주민들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이 공공기관 직원의 보편적 수준에 비해 낮다는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주민복리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존재이유를 감안하면 이러한 기관 구성원들의 급여차이는 가급적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 수준에 근접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초의회 의원들은 타 기관과의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의정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역량 내재화를 위한 제언 : 정부혁신의 지속가능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이병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팀장



Ⅰ. 들어가며 : 생각해보기

1992년에 사람, 자본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기초가 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 체결되었다. 마스트리흐트는 벨기에와 국경을 맞닿고 독일과도 인접한 네덜란드 도시로 외부환경 변화와 흐름에 개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 도시 출신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앙드레 류(André Rieu, 1949년 출생)는 이런 열린 분위기에 성장하면서 음악을 배웠고, 기존 엄숙한 연주회를 신나고 활기찬 공연장으로 변화시킨 혁신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의 음악을 거리감이 없고, 즐겁고 감동적이라고 느끼며, 그를 공연기획가, 연주진행자 또는 멀티 엔터테이너(Entertainer)로 칭하곤 한다. 그럼, 그를 이런 연주혁신가로 만든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소통과 신뢰 그리고 개방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항상 관객들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호흡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단원들을 신뢰하여 전폭적인 연주 재량권을 부여하고, 기존 연주형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열린 자세로 공연 목적과 분위기에 적절한 연주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신선한 연주방식에 착안하여 정부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영국 빅토리아 시대 낭만주의 풍경화가로 유명한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 1775년 출생)는 2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증기기관차가 보여주는 새로운 속도와 힘에 매료되었던 시대 분위기를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색채를 사용하여 '비, 증기 그리고 속도'(1844년)를 탄생시켰다. 기존 사실주의에 기반한 풍경화를 생동감 있는 풍경화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바로, 유럽은 엄청난 속도감을 자랑하는 증기기관차 덕분에 농업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에 토대로 한 3차 산업혁명이 이어졌고, 이제는 D.N.A(Data, Network, A.I)를 핵심 원동력으로 경제, 산업,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직면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에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은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에 방점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은 조직의 전략적 관점에 의거해서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 인사관리, 소통과 변화관리 등 실행 단위의 방식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IBM은 "기업이 디지털과 물적 자원들을 결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해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Microsoft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중개회사인 아마존은 고객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설 필요도,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노 라인즈, 노 체크아웃(No Lines, No Checkout)'의 신개념 미래형 상점인 '아마존 고(Amazon Go)'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처럼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전략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점검을 토대로 디지털 전략들을 도입하여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여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강조한 '경쟁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려고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은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에 방점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 전환은 조직의 전략적 관점에 의거해서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 인사관리, 소통과 변화관리 등 실행 단위의 방식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A.T. Kearney(2016)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을 Big data, AI, IoT 등장에 따른 경영 환경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을 성장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디지털 전환은 조직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들인 것이다.

Ⅲ. 기업들의 혁신 트렌드(Trend) 분석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인 가트너(Garter)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파괴적 혁신을 동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된 2020년 10대 주요 전략적 기술 트렌드를 크게 인간중심(People-Centric)과 스마트 공간(Smart Spaces)으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사람중심 영역에는 여러 가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통합형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도구를 결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1) 초자동화(Hyperautomation)로 대표적으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iBPMS(intelligent Business Process Management/업무처리절차와 데이터 관리가 결합된 기술) 및 디지털트윈(Digital Twin/

디지털 복제품) 등이 있다. 디지털 가상세계 속에 VR·AR·MR(Mixed Reality)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업무처리 환류성을 높일 수 있는 2) 멀티 경험성(Multi-experience)이 있다. 일반시민이 디지털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데이터 분석·처리·활용 등 접근성을 높이는 3) 디지털 민주화(Democratization)로 시민 데이터 과학자, 시민 통합분석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 인간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4) 휴먼증강(Human Augmentation)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식을 부가하여 신뢰를 높이는 5) 투명성과 추적성(Transparency and Traceability)이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공간은 좀 더 정교하고 신속화된 정보처리 기술인 6) 강화에지(The Empowered Edge), 중앙단위 처리에서 벗어나서 고객들에게 점점 단위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7) 분산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여러 환경속에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8) 자율이동체(Autonomous Things), 스마트 도시공간에서 시스템 제어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9) 실용적 블록체인(Practical Blockchain) 그리고 머신러닝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패턴을 파악,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10) AI 보안(AI Security)이 있다. 이런 혁신 트렌드의 방향성은 인간과의 소통강



화, 강화된 위임을 통한 자율적 업무처리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개방적인 수용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정부와 공공부문의 혁신 방향과 주요 전략 제언

정부와 공공부문이 4차 산업혁명 속에 디지털 전환과 빠르게 태동하는 혁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1) 내발적인 혁신 동기부여 촉진 전략 : 흡수역량(Absorbtive Capacity) 내재화

Rogers(2005)는 혁신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실행 방법을 수용 및 활용하여 기존 방식과 절차를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Christensen이 1997년에 발간한 'The innovator's Dilemma' 의하면, 구성원들의 기발한 발상을 통한 새로운 기법 도입과 숨겨진 영역 개척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 연결되어 조직의 핵심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개인들의 혁신 수준과 혁신 의지가 조직의 미래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혁신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촉진되어야 조직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 의지와 수준이 높아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흡수역량 내재화가 필요할 것이다. Cohen & Levinthal(1990)에 따르면, 흡수역량은 새로운 외부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인식·인지(Recognizing)하고, 이를 개인 내부적으로 흡수·소화(Assimilating)하여 다른 분야 또는 방법에 적용·활용(Applying)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보 홍수 속에 업무 수행 중 지식과 기술의 가치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를 자기 것으로 수용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연결해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 또는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홍수 속에 업무 수행 중 지식과 기술의 가치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를 자기 것으로 수용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연결해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 또는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흡수역량이 높아지게 되면, 혁신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게 된다(Van Den Bosch et al., 1999). 이를 위해서는 우선, 흡수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HRM)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일방적이고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방식을 참여형 토론과 패널 수업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주제, 이슈와 학습방식 등을 직접 선정하고 주도하는 학습주도적 교육(Lean Coffee Format)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의거한 아이디어, 해결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가는 '집단지식 연결형' 방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치 창출을 촉발하는 내발적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게 되어, 현업에서 활용, 적용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스캠퍼(SCAMPER) 기법'을 적용하여 해결책 마련의 실마리와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Eberle, 2008).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가 장려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와 논의보다는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류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 팩토리' 마련이 더 필수적이다. IBM은 '이노베이션 잼(Innonation Jam)'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과 문제 해결하는 효과를 보았다. 조직 구성원들의 흡수역량이 높아지게 되면 외부 정보 활용과 환경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린 혁신(Open Innovation)'도 성공적으로 창출하게 될 수 있다(Chesbrough, 2003).

2)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 전략 : 애자일(Agile)을 넘어 데브옵스(DevOps)로

미국의 구인·구직 웹사이트 '글래스도어(Glassdoor)'가 발표한 '2020년 미국 내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순위에서 1위는 2006년 MIT공대 출신인 브라이언 핼리건(Brian Halligan)과 다메쉬 샤(Dharmesh Shah)가 창업한 인바운드 마케팅, 판매와 서비스를 위한 자동화 플랫폼 기업인 허브스팟(HubSpot)이 꼽혔다. 그 비결은 '기민한 조직(애자일, Agile)'에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고객들의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기민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Mckinsey는 기민한 조직의 5가지 특성(The Five Trademarks of Agile Organizations)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조직 전체 목적과 비전의 공유, 권한위임이 된 네트워크 팀 구조, 빠른 의사결정과 학습패턴, 역동적인 인적자원 중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과감한 도입 등이다.

> 기민한 조직의
> 5가지 특성을
> 조직 전체 목적과
> 비전의 공유, 권한위임이
> 된 네트워크 팀 구조,
> 빠른 의사결정과 학습패턴,
> 역동적인 인적자원 중시
>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 과감한 도입 등이다.

허브스팟은 조직 구성원들과 비전 공유를 통해서 파격적인 권한위임으로 실무자들의 아이디어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를 통한 학습 능력을 제고하여 고객들의 니즈를 짧은 시간 안에 발굴하여 이에 적합한 모델을 제공한 것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Glassdoor, 2019). Peter Cappelli (2013)는 '부품사회(Why Good People can't Get Jobs)'에서 애자일이 조직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한위임(Empowerment)'이 핵심적이라고 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시제품을 출시하여 고객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다(Ford & Fottler, 1995). Speitzer(1995)는 일에 의미 발견과 직원들의 능력, 자기결정권 부여와 효능감이 작동하면, 동기부여가 인지적으로 발현하여 혁신행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Wong & Giessner(2018)은 부하직원들의 권한위임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리더가 충족시켜 줄 경우 자율성에 대한 인지 범위가 넓어져 업무 혁신이 더 높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권한위임이 업무에 대한 방임이 아닌 실질적인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임 범위 설정을 위한 소통, 상호의견 교류 및 피드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Wong & Giessner, 2018). Hamel(2008)은 '경영의 미래(The Future of Management)'에서 조직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창의적이며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진 직원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시를 하달하는 방식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Cappelli(2013)는 애자일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은 단순한 평가와 관리가 아닌 지속적 소통과 의견 교환을 하는 코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코칭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내 전문 코칭 배치를 통하여 즉각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 마련 및 애자일 조직운영 시 충돌되는 기존 조직문화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권한위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적절하게 제거하여야 권한위임에 따른 실질적인 효능감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Sims & Lorenzi, 1992). 결과적으로 권한위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애자일은 데브옵스(DevOps)로 확산될 것이다. 개발과 운영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제품 개발초기부터 관계 부서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업무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방식으로 발전된다.

3) 추적성이 가능한 업무 협력 기반 구축 전략

한국문학을 이끈 문학평론가 김현(1942년 출생)은 "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또 한 번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짐으로써 죽는다"라고 했다. 그만큼 기록되지 않는 것은 빠르게 사라지고 허망하게 된다고 했다. 르네상스 시대 미술가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는 이런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200여 명의 예술가들을 기록한 '미술가 열



전(Le Vite)" 남겨 그들의 성과와 특성을 상세하게 남겼다.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성과, 협업 정도 및 업무 기여도 등에 대한 기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평가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프로젝트 추진 시 실시간으로 직원들의 의견교환, 수정 및 보완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실시간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로 슬랙(Slack), 잔디(Jandi), 플로(Flow), 노션(Notion), 콜라비(Collabee) 그리고 G-Suite 등이 있다. 메신저, 업무툴 및 클라우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Atlassian Apps 등 그 서비스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 이런 업무 플랫폼의 특성은 개인들의 업무 기록, 의견교환, 정보제공 및 노하우 공유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전반적인 업무 추적과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직, 업무 재배치에 업무 인수인계, 신규 배치에 따른 OJT도 이 플랫폼에 기록 사항 등을 살펴보게 되면 빠르게 업무 숙지가 가능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록된 사항 등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평가, 성과보상 및 승진평가 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일부 스타트업 회사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 신규자 교육, 업무인계·인수 및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필자가 스타트업 기업 현장 인터뷰 결과, 2020.6.2.).

V. 마무리 : 담담함과 재미의 결합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및 러시아 등에 걸쳐진 라플란드(Lappland)에는 경계없이 살아가는 사미족(Sámi)들이 있다. 이들은 아시아계 우랄민족 계통으로 극한지역에서 시수(Sisu)라는 정신력으로 살아왔다. 시수는 우리말로 끈기, 용맹, 대담함, 회복력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감내하는 내면의 긍정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면 혁신은 이런 과정과 유사하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대한 장벽 속에 포기하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을 때 시수의 정신을 꺼내 담담하게 굳건히 헤쳐나가면 혁신은 우리 곁에 따사로운 햇살을 보여 줄 것이다. 이때 혁신을 추진할 때 재미가 추가된다면 그 과정은 더욱더 풍요롭고 유익할 것이다. 영국 버진그룹(Virgin Group)의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은 '괴짜 경영', '펀 경영'으로 유명하다. 그는 경영을 하는 이유는 직원들과 재미와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고 고객보다 직원들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혁신을 또 다른 일 혹은 불편함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리더는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기반한 권한위임 그리고 열린 자세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직원들은 스스로 즐겁게 재미나게 혁신을 추진하여 그 성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식, 손가녕, (2018) 제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의 이해,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3호 통권 640호.
- 조남문, 오상진, (2018) 조직 내 구성원의 흡수역량 및 폐기역량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식창출과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제33권 제3호 2018년 6월 pp.269~289.
- Christensen, Clayton M., Rory McDonald, Elizabeth J. Altman, and Jonathan E. Palmer. (2018) Disruptive Innovation: An Intellectual Histor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Special Issue on Managing in the Age of Disruption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5, no. 7 (November): 1043 – 1078.
- Cohen, W. and D. Levinthal, (1990) Absorptive Capacity :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5, No.1, 128-152.
- Gary Hamel, (2007) The Future of Management, Harvard Business School.
- Henry W. Chesbrough, (2003) Open Innovation: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ssachusetts.
- Peter Cappelli, (2018) HR Summit and Expo Speaker, Available from: https://hr.knect365.com/hr-summit-expo/speakers/peter-cappelli [Accessed 17 June 2020].
- Peter Cappelli and JR Keller, (2013) A study of the extent and potential causes of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s,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6 (4), pp. 874-901.

사회적가치와 공공부문의 혁신





최천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의 방향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참여와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기본방향은 국회에 제류 중인 법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2014년 6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과 더불어 약 60여 명의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최초 발의하였으며, 이후 김경수 의원 외 51명이 2016년 8월에 재발의하였고, 이어서 박광온 의원 외 21명이 2017년 10월에 재발의를 하였다. 21대 국회에서도 박광온 의원 등에 의해 첫 번째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이 소고에서는 공공부문 혁신의 핵심인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가치의 개념 등에 대한 정의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전주의 시대에 추구되었던 양적 팽창의 신화는 깨지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혁

신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공공부문의 혁신은 많은 좋은 개념과 이야기 속에서도 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아쉬움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의 방향은 사회적 가치라는 질적이며 가치적인 혁신의 방향이 이 시대에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 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였다(행정안전부, 2018).

>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키워드 분석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공공성', '현장중심 적극행정', '효율적인 정부', '국민 소통과 협력'이 도출되었다. 또한,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약속을 잘 지키는 정부', '정의로운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에 대한 국민의 지배적인 생각은 '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다."

정부는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2018년 2월~3월까지 일반 국민 2,143명이 참여한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키워드 분석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공공성', '현장중심 적극행정', '효율적인 정부', '국민 소통과 협력'이 5대 핵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또한,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약속을 잘 지키는 정부', '정의로운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에 대한 국민의 지배적인 생각은 '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다.
정부 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둘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보다 잘 실현되기 위한 노력이다. 셋째,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든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적용

사회적 가치의 정의는 포괄적인 성격이 있어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막상 정책 담당자들이 본 개념을 사업과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사회적 가치가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퇴조와 관련된다. 1980년대부터 정부의 실패라는 명제를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된 신자유주의 사상은 2008년 이후 퇴조하게 된다.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는 행정적 또는 정책적 영역들을 확인하고 영역들 간의 경계를 구분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회공동체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고, 어떤 가치의 배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고 없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치란 공동체가 공통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공식 및 비공식적인 법 제도 등이 중요하며, 또한 공동체의 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는 행정적 또는 정책적 영역들을 확인하고 영역들 간의 경계를 구분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회공동체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고, 어떤 가치의 배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고 없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치 배분에 어떠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하는 정책결정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가치의 개념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나, 정부와 공공기관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 함께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가치를 지향한 공공부문 혁신은 그동안 국민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성은 부처와 공공기관의 본래 임무를 뜻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익성은 다수의 행복추구라는 개념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부처를 위한 기관인가? 아님,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성을 생각할 수 있다. 배려와 책임이 있고 함께 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나누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사회가치는 공동체가 공통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분배의 역할을 담당

〈그림 1〉 사회가치의 개념



하는 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치는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이며, 분배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출되며, 분배의 기준은 가치의 특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나 개념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범용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UN 글로벌 콤팩트, GRI G4 가이드라인, ISO26000 등이 사회가치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새로운 도전

지금 우리는 무척 엄중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래된 팬데믹(Pandemic), 그리고 인류에게 닥친 재앙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하는 미래는 우리의 어제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시민 한 사람 한사람의 삶이 달라지듯, 포스트 코로나(Post-COVID19)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도 새로이 혁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부문의 혁신은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 더욱 빠른 속도의 변화의 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중요성과 언택트 시도로 가속화 되고 있는 가치있는 삶의 추구와 가치있는 만남의 중요성은 우리사회가 양적인 발전주의 시대에서 질적인 가치의 시대로 가는 그 속도를 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공공부문 혁신이 사회적가치 중심의 혁신의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자치분권은 깐깐한 견제와 대안, 통 큰 협치에서 시작된다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인터뷰

• INTERVIEWER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보센터장

전성만 **이해양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소개와 무주군 의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해양 안녕하세요! 무주군의원 이해양입니다. 저는 2014년 제7대 무주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제7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 무주군 첫 여성 선출직으로 제 8대 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회는 7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인구 2만 5천명, 6개 읍면·48개 법정리와 4,450억 원의 재정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아름다운 관광도시 무주군의 주민행복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의안의 전문적 심사를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2개 상임위원회와, 예산의 심사와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8대 의회에서는 총 14회 157일의 회기 동안 23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30건의 자치법규안을 발의하여 군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적법한 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양한 관심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 토론이나 회기 시에는 불꽃 튀는 논쟁으로 무주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 집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주요정책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바른 방향설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시인으로 활동하였고, 무주지역자활센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실감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의 공정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차별 없는 인권보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정치가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어서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후 의원으로서, 무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6년 동안 민생과 밀접한 조례 9건을 대표발의

했으며, 5분 발언 11회, 군정질문 10건, 건의안 7건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입법 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 그리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는 무주가 농촌지역으로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광산업에 많은 부분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최근 몇 년간은 주민생활 개선 및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인접 지역 간 교류확대를 위한 교통편의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무주~전주 버스요금 인하, 2019년 무주~서울 버스 일일생활권 실현, 2020년 무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신설 등 인근 지자체인 진안과 장수 군민들에게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주민교통편의 성과를 예산투입 없이 발품으로 이룬 바 있습니다.

진성안 **의원님이 시인이었다는 점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말씀 중에 '정치가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시인다운 멋진 문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제7대 무주군 비례의원으로 시작하여 제8대 지방선거 최다득표로 재선에 당선되셨다면, 많은 의정활동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개에서 말씀해 주신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조례안 또는 개정 조례안이 있는지요?**

이해양 사회복지사로서, 아무래도 군민의 건강과 복지에 경험과 관심이 많다 보니 임기동안 이와 관련된 입법이 많았습니다.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등이 그것입니다. 이 외에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평화 협력 합의에 따라,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새로운 기류에 발맞추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확립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저는 사실 태권도와 조선왕조실록 사고지인 적상산(안국사)과 묘향산(보현사) 등 무주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간 남북교류 사업을 꼭 추진해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법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7733부대 무주대대 철회요구)


반딧불시장 장보기 행사

66

2017년 무주~전주 버스요금 인하, 2019년 무주~서울 버스 입일생활권 실현, 2020년 무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신설 등 실질적인 주민 교통편익 성과를 예산투입 없이 발품으로 이룬 바 있습니다.

99

모든 입법활동이 의미 깊고 소중하지만 몇 년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최근 발의한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행정이 미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탁이란 행정권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체마다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민간위탁 사례를 여럿 접하게 되면서 기존 조례의 전면적 개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행정사무 민간위탁 추진으로 무주군 행정이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전성만 **그렇다면, 의정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과 상황이 있는지요?**

이해양 2014년 군립 요양원 회계 담당자의 공금횡령 사건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알게 돼서 큰 충격에 빠졌던 당시의 기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의혹을 공론화하고 집행부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와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었습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군 사회복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을 목격하는 마음, 이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마음이 참담했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반듯하고 성숙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사건을 열심히 파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참 마음 뿌듯한 순간도 있습니다. 지난해 무주~서울 간 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배차시간 조정을 통하여 이른바 '무주~서울 버스 일일생활권'을 이루어 냈던 일입니다. 주민들이 병원진료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보거나 가족과의 왕래를 위해 서울을 찾을 일이 많은데, 기존의 버스운영 구조에서는 당일에 다녀오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배차시간이 불합리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원이 되고서는 확실히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5분 발언과 건의안 채택에 이어, 군민 서명운동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미팅 등 관련 기관과 버스회사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주군 윤여일 부군수님과 담당팀이 함께 참 열심히 뛰어 준 결과이기도 하지요.

이후에 어느 주민분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항암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서울을 찾으셔야 하는 한 주민께서 버스시간이 조정된 덕분에 편하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치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하는 만큼,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도 많지만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공헌하게 되었을 때, 군민께서 제 노력 덕분에 웃으시게 되었을 때는 고통도 피로도 다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성만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전 세계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확진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바대면, 대외활동 저하 등 무주군의 지역경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무주군 지역의 현안과제와 대응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이해양 농촌 지역의 공통 현안은 단연 인구문제입니다. 인구문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맞춤형 큰 전략들이 함께 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생활 인프라, 일자리, 자녀양육과 교육 여건, 그 밖에 여러 사회·경제구조와 복잡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무주군도 인구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주군은 전입 촉진과 주민의 거주 유지를 위한 전입세대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결혼 및 출산장려금 정책과 귀농·귀촌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주사랑상품권을 운영 중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도서관 사업 등을 통한 평생학습의 기반, 도시재생사업 등 마을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분하게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요구되며, 도시인들의 무주에 대한 선호도가 실질적인 인구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귀농·귀촌·귀향인 정착 지원정책 점검과 함께 지역민과의 융·화합 문제도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또한 시대의 화두인 만큼, 산림·환경·농업·관광 등의 정책들이 보존과 개발의 적정한 균형을 이루며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 또한 인구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굵직한 이슈들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군부대 지키기, 태권사관학교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단체장, 정당, 그리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 부처 등 함께 뛰어다닐 수 있는 민·관·정의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질병관리 능력이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를 중심으로 더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자가격리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 대한 감염예방물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도「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청정지역 무주의 선제적 대응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무두-서울 1일 생활권 첫차 운행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진성얀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양 의원님 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번 저희 이슈와 포럼의 주제가 정부혁신, 공공혁신, 지역혁신 등의 '혁신' 키워드에 맞는 새로운 변화의 필요와 공감을 위한 의제 확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혁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해양 기후, 산업구조와 국민 가치관, 신종 감염병 등 우리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판이할 정도의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하고, 때로는 그 변화가 나의 근원을 흔드는 정도의 이른 바 혁신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낡은 것들을 탈어내는 진통의 과정, 혁신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따릅니다. 내 아이디어가 너무 별난 생각일까봐 지레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혁신도 사실은 작은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되며, 어차피 혁신은 성공하기 전까지는 괴짜 취급을 받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라면서, 혁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전환을 국정철학의 토대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강

조하고 있습니다. 官 중심의 자치가 民 중심으로 실현되는 생활정치가 '공공혁신'의 기본가치라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관계는 견제와 협치의 수레바퀴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흔히 무사안일(無事安逸)에 비유됩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는 무사안일의 수단이 아니라, 소신 있게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동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공익추구를 위한 소신 있는 군정운영으로의 전환이 혁신의 출발이고, 지방의원은 주민주권의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주민과 지자체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공동체 혁신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혁신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친구를 원하며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위한 혁신에서 수없이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과제를 꼭 우선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회조직이 아니라 행정의 조직입니다.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광역단위 순환근무 형태의 인사권이 가장 의회다울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지방의원의 경험으로 강력하게 주장해봅니다.

66
공무원은 공익 추구를 위한 소신 있는 군정운영으로의 전환이 혁신의 출발이고, 지방의원은 주민주권의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주민과 지자체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공동체 혁신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99

전성만 **의원님 말씀 중에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는 말씀은 의미심장하게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이 수행하고자 하는 무주군의 혁신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해양 제가 생각하는 무주군 발전의 키워드는 '무주에 대한 큰 그림(長久之計)과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무주'입니다

무주는 위치상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구천동 33경, 덕유산과 적상산 등 천혜의 자연과 청정자연의 전형사 반딧불이가 있고 세계적으로 210개국의 1억 5천만 명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사고(史庫) 등 유구한 역사의 발자취를 담은 문화유산,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길러내는 비옥한 땅을 보유한 최고의 잠재력,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자원을 잘 엮어 무주의 매력을 발산시킬 수 있는 비전, 흔들리지 않는 큰 그림으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0 AUGUST VOL. 32 • 53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속에 살고 있는 주민의 행복한 모습이 최고의 상품입니다. 이 주제를 최종 목적으로 한 총체적 발전전략 수립과 컨트롤타워 설치가 요구되며, 정책발굴과 실행과정, 그리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족했던 출산과 육아, 청소년, 청년 등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에 보다 집중하여 생애주기를 배려한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하며, 결국에는 전 세대·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잡힌 투자가 되도록 의원으로서 끊임없이 촉구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모델의 무주를 만들어가기에 손색이 없는 지역이 저는 무주라고 자부합니다.

전성만 **장시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치가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되기 위한 의원님의 향후 포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해양 지금껏 가졌던 다짐과 같이 단체장처럼 고민하겠다, 4년만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군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현장을 찾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을 만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답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이기도 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겸비한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 중심의 사회구조, 그리고 풀 단체장, 풀 의회의 기울어진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자치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향후 자치분권의 확대로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이는 자연히 의회의 역할 확대와 연결되고,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잘 결정해야 군정이 성공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66

혼란과 위기가
수없이 반복되는
시대인 만큼,
열정과 균형감각,
전문성을 겸비한
지도자로,
또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잘 결정해야 군정이
성공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99

지방자치 30년,
과감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며, 크고 작은 권력의 사유화는 청산해야 합니다. 국가의 근간은 지방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 다양성과 개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넘어야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들을 지지하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혼란과 위기가 수없이 반복되는 시대인 만큼, 매 순간 진정성을 가지고 군민이 부여해 준 임기동안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 놓겠다는 자세로 군민을 위한 고민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열정과 균형감각, 전문성을 겸비한 지도자로, 또 막중한 책임감으로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의정, 집행부 견제와 협치를 통해 군민들께 행복꾸러미를 선물하는 자치의회가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례시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Ⅰ 들어가며

2020년 7월 3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특례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례시란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 혹은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행정수요가 많아 특별히 행정상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도시들의 경우 인구가 많아 그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사실상 광역단체와 유사한 기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시'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대도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출처 : https://www.changwon.go.kr/portal/contents.do?mkId=0607010101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시는 창원시와 수원시이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면적이나 재정 규모가 여타 광역시에 비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어 행정이나 재정 권한이 작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 결과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원시 또한 인구 125만의 거대 도시로 특례시 지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들이 특례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특례시 추진은 해당 도시만의 주장은 아니며,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도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특히 특례시 지정을 주장하는 광역단체가 속한 도에서는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변 기초단위 지자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례시 지정이 고려되는 대도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로 이들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자치단체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특례시 지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인구 수 50만 혹은 100만 이상 도시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특례시 지정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1]

이하에서는 특례시 도입 논의의 배경은 무엇이고 국회에서는 어떤 내용의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특례시 관련 논의의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동아일보, 2020.6.15.일자 기사, "만병용 의정부시장 특례시 지정은 부잣집 특혜, 중단해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15/101519565/2

Ⅱ 특례시 도입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인구규모가 큰 도시들은 광역시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창원시나 수원시 등 기초단위 도시 중에도 도시규모가 확대되면서 인구 및 행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출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기초단위 도시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4곳이고, 50만 이상인 도시도 12곳에 이른다.

〈표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순위	도	시	인구(명)	면적(㎢)
1	경기	수원	1,194,465	121.09
2	경기	고양	1,066,351	268.08
3	경기	용인	1,059,609	591.26
4	경남	창원	1,044,740	748.04
5	경기	성남	942,724	141.64
6	충북	청주	839,596	940.83
7	경기	부천	829,996	53.45
8	경기	화성	815,396	697.77
9	경기	남양주	701,830	458.12
10	전북	전주	654,394	206.04
11	충남	천안	652,258	636.08
12	경기	안산	650,918	155.73
13	경기	안양	567,044	58.46
14	경남	김해	542,455	463.45
15	경기	평택	513,027	458.24
16	경북	포항	507,025	1,130.08

출처: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20, p.209.

이처럼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의 경우 사실상 인구 규모나 행정 수요가 광역시에 맞먹는 규모여서 광역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대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현재 소속되어 있는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광역단체 입장에서는 인구나 재정 등의 축소로 이어지게 되며, 다른 자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 승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특례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되, 재정이나 행정 처리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례시 도입은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당시 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도시의 행정 수요 확대를 감안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특정시'로 명명하고 각각에 대해 행정 및 재정 관련 특례를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일본의 행정구역을 모델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로, 20만 이상의 도시는 중핵시(中核市)로 지정하여 행정이나 재정상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정령지정도시는 일본에서 1956년 도입되었으며, 도입 초기 인구 100만이 기준이었으나 지역의 인구 감소로 기준이 50만으로 낮아졌다. 정령지정도시나 중핵시는 행정구역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구 기준에 따라 특정 명칭을 부여한 뒤 그에 부합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Ⅲ 제21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우리 국회에서는 제20대 국회 이후 특례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찬열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인구 100만 혹은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안들은 제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로 그 공을 넘기게 되었다.

제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었는데, 출범 이후 1달 만에 특례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되었다. 또한 7월 3일에는 정부에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관련 법률안들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고,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해당 도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만 특례시의 선정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안별로 차이가 있어서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의견부터 인구 20만 이상 혹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률안까지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표 2〉 특례시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	특례시 관련 내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2020.6.1.)	인구 100만 이상, 혹은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2020.6.1.)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특례시에 인구기준 외에 행정 · 재정 · 경제 요건 반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2]	양경숙의원 (2020.6.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2020.6.5.)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 추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2020.6.8.)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혹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2020.6.10.)	인구 20만 이상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2020.6.10.)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 중추역할을 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2020.6.10.)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2020.6.30.)	인구 100만 이상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2020.7.3.)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혹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 국가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특례시로 지정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Simple.do)

2) 양경숙의원안은 다른 의원안과 달리 전부개정안으로 특례시 지정 외에도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개정의견을 담고 있다.

이상 발의된 법률안들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있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재정이나 행정상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 도입에 앞서 특례시 선정의 기준과 특례시에 부여되는 지위 및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인구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인구 50만 혹은 그 이하 규모라도 도청 소재지거나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특례시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례시 지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례시 선정 기준이 되는 인구 규모를 최소 50만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특례시 기준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법률안들은 특례시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권한이나 지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Ⅳ 나가며

특례시 지정은 대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거론되는 인구 100만 혹은 50만 이상 도시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자칫 특례시 도입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특례시 도입에 앞서 지정 기준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더불어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윤의원실 주최 세미나 자료집,
「일본 정령지정도시와 우리나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교연구」, 2013.
- 하혜영, "지방자치단체 특례시 제도 도입 현황과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 제1731호, 2020.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20.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Simple.do)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남원시, 혁신을 디자인하다!



I 들어가며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행정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혁신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혁신의 주제, 대상, 내용, 방법 어느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무엇에서부터 변화를 이루어내고, 어떻게 하면 정부 전 조직에서 행정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모두가 혁신의 주체로 나서 행정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는 행정혁신을 고민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질문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혁신의 결과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지닌다. 이러한 지방 단위 행정혁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만으로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층이나 담당자 몇 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혁신 주장은 당위



성 차원에 머물러 지방자치단체 전 조직으로 확산되기 어렵다.
남원시는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일하는 방식 변화"라는 주제의 행정안전부 '국민 디자인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스스로 행정혁신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행정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행정혁신의 주체인 남원시 공무원의 공감임을 주목하였다.
혁신을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함께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남원시 혁신 담당자는 어떻게 하면 동료 직원들과 함께 행정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남원시 국민 디자인단과 공무원 100인 원탁회의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혁신의 방안을 설계한 사례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Ⅱ 혁신 디자인 과정

1) 남원시 국민 디자인단 출범

남원시에서는 행정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디자인단을 담당할 공무원을 모집하였고, 고정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과 서비스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느슨한 참여' 방식으로 함께 하는 동료들 7~8명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혁신 회의 때마다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매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며 다른 공무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도를 고민하였다. 조사준비를 위해 키워드를 만들고, 행정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었고, 진짜 문제정의를 위한 페소나 작업이나 고객여정맵 등 국민 디자인단 서비스 툴을 이용하여 시험해 보고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19년 5월 29일 남원시 국민 디자인단을 출범시켰다.



담당(팀장)과 진행


공무원노조 문영진과 진행


논의된 이야기 정리

2) 남원시 공무원의 목소리를 듣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된 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서비스 디자인기법을 통해 직원들 간 숨겨진 니즈와 세대 간 갈등 문제를 도출하였다. 남원시에서는 다양한 직급, 세대, 성별로 구성된 직원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선배공무원과 후배공무원 간 문화차이', '불합리한 업무편중과 보상의 연결부재', '내부 성과위주의 비효율적인 업무추진' 등 주요 문제들을 공감하고 소통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통의 문제를 선정하고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논의 자리에 참여한 직원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자리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담당자 팀장과 진행


공무원노조 운영진과 진행


논의된 이야기 정리

3) 남원시 공무원 100인 원탁회의

앞서 다양한 직급, 세대, 성별의 직원들이 나눈 이야기를 확산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남원시 공무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남원시 공무원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나눈 이야기들 중 중요한 문제로 선정된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남원시 공무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통해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민 디자인단 출범


조사 준비와 목표 설정



서비스 디자인 툴 이용

Ⅲ 혁신 디자인의 결과

남원시는 국민 디자인단과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공통의 문제점으로 직원들의 숨겨진 니즈와 세대 간 갈등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단지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

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남원시 직원들이 스스로 조직의 문제를 찾고 정의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향후 남원시만의 행정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적인 절차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남원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하였다. 퍼소나 작업, 고객여정맵, 퍼실리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기법들을 활용한 것을 계기로 남원시 학습동아리 〈디자인 남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는 조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 남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ONE-PAGE 보고서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이다.

'디자인 남원,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기존의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같은 1:1 관계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 16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서 질문과 답이 오갈 수 있도록, 3명의 답변자(선배 공무원)와 다수의 질문자가(후배 공무원) 만나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매뉴얼로 제작하여 남원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ONE-PAGE 보고서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고서 작성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ONE-PAGE 보고서 정착을 위한 교육과 보고서 양식 통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화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으로 5가지 조직문화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전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개선지침은 구체적으로 1) "연가 신청 시 사유를 묻지 마세요." 2) "회식 일정은 구성원이 함께 정해요." 3) "교육! 가라고 권장해 주세요." 4) "옆 동료에게 도와줄 것 없는지 물어봐요. 5) 서로 존중하며 대화해요."이다.

Ⅳ 시사점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전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제를 찾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스스로 행정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제까지 행정혁신이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이거나, 특정 사업 담당자의 몫이 되기 쉬웠다는 평가에 따라 일하는 방식 변화를 위해 모두가 혁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남원시는 전문 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기법들을 통해 조직의 주요 문제로 직원들의 숨겨진 니즈와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찾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자인 남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ONE-PAGE 보고서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디자인단을 출범하고, 공무원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하여 조직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해결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많은 의견들을 담았다.

정부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단위의 혁신방안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행정역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행정혁신의 의지는 높을지언정,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원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남원시의 사례는 인구 8만여 명의 그리 크지 않은 중소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자원과 인력으로도 직원들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행정혁신 방안을 찾고 노력한 예로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원도 인제군, 살맛나는 농촌 1번지 꿈꾸다

인제군-농축협-농민으로 일원화된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Q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째, 인제군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기간산업이나 그동안 일부 특정 농가에 편중된 지원에서 농업인 유형별 맞춤형,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
둘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소득작목 확대 한계, 인건비, 농자재대 대폭인상 등에 대응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의 지원이 필요
셋째,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관광과 연계한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을 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요구

맞춤형 지원 시스템 비전과 전략

비전	미래 생명 산업인 농업을 육성 '저녁이 밝은 인제' 지향
목표	가. 농산물 생산을 농업인, 생산지원은 인제군, 판매유통은 농축협이 담당하는 체계화된 농업 보조 지원체계 구축하여 경쟁력 제고
	나. 기관별 역할의 분담으로 체계적인 농업인 지원 시스템 구축 – 행정 : 영농규모, 작목별 농가유형 D/B화 구축 체계화된 관리로 농가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시행 – 농축협 : 새로운 사업발굴 제안, 농축협 부담금확보, 사업대행 – 농업인 : 영농현장 애로사항, 농업 발전 방안제안, 투명한 보조 사업수행 ➔ 행정 – 농축협 – 농업인(단체) 협의체 구성 운영 – 농업현안 및 애로사항 발굴하여 기관별 협업사항 도출

Q 주요 추진 실적은?

1. 행정–농축협–농업인 협의체 구성 상시 운영 정책 반영
   1)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을 통한 농업인 지원체계 수립
   – 농산물 생산은 농업인, 생산지원과 마케팅은 행정, 판매유통은 농축협이 담당하는 체계화된 농업보조 지원체계 구축
   ※ 인제군의회 농축협 협력사업비 군비 예산 반영 적극 협조
   2) 행정–농축협–농업인 협의체 구성 운영
   – 참석 : 군수, 농협중앙회인제군지부장, 각 농축협장(상무) 3, 소과장
   – 농업현안 및 애로사항 발굴, 기관별 협업사항 도출 등 정책 반영


유통활성화방안 2018.10.


영농자재 지원 협의회 7회


농업발전 토론회 2019.7.



농축협 사업 협약 2020.1.

3) 행정-농축협 협력(대행)사업 협약체결 추진 : 2020. 1. 29.
- 농산물 포장재·운송료 지원 등 56건 협력사업 22,000백만 원/연
  • 사업비 재원 : 22,000백만 원(행정 12,000, 농축협 3,100, 농가 6,900)
- 업무효율성 제고 : 민간자본보조(간별 보조결정) ➔ 56건 일괄협약 추진

2. 농업인 소득 지원시스템(Hagrix) 구축 운영
1) 농업경영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연계 정보 활용
- 4,200여 호 경영주(구성원) 정보, 영농규모, 작목정보, 교육 이력 등
  ※ 인제군, 전북 익산시 등 전국 6개 시군만 연계 정보 활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실적 및 운영현황 등 매년 중앙부처에 보고
2) 영농규모, 작목별 농가유형 구분 D/B화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보조사업 이력관리 등 체계화된 농업인 정보 활용 부정수급 방지


농업인보조관리시스템 구축 주 화면


시스템 활용 직원 교육

3. 농업인 맞춤형 지원
1) 특정 대농에 편중된 지원을 농업인 수요에 맞춘 농정 전환
2) 맞춤형 지원 발굴·시행 : 영농자재 반값 지원 등 4개 사업 11,365백만 원
- 소규모 경영농가 특별 지원 : 770백만 원(보조 539, 농가자부담 231)
  • 대상농가 : 소규모 경작농 0.2~0.5ha, 고령농 70~75세, 부녀농(경영주)
  • 소형관리기 70대, 비닐하우스 70동(2.3ha) 보조율 상향 지원 50 → 70%
- 전 농가 대상 영농자재 지원 : 10,500백만 원(보조 4,800, 농협 506, 농가 5,194)
  • 지원품목 : 비료, 농약, 농업용필름, 고추지주대, 원예용상토 등 9개 품목
  ※ 2019년 실적 : 4,000여 호 수혜, 9,907백만원(보조 4,554, 농협 467, 농가 4,886)



기본계획 협의회 보도사례


추진계 교육(의약품)



천안지 찬 농가 우편발송



농협 사업 홍보



비료 지원문구 표기 판매

-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현장실습) 맞춤형 교육 실시 정주여건 마련
  - 매년 6~11월 40명, 35백만 원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70명, 60백만 원, 김매는 기계 등 3종 70대

4. 사업 이행사항 대내외 적극 홍보

각종 영농교육, 전농가 홍보지 우편발송 3회, 라디오 1회, 신문 다수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


농민신문 기획 보도 2020. 2. 24.


우수사례 전파 농기자재 신문 2020. 7. 1.


경향신문일보 보도 2019. 4. 1.


경인일보 지평구축보도 2020. 2. 10.


행정-농축협 협력사업 협약체결

Q 주요 성과는?

첫째,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과감한 농정 전환으로 공평한 혜택과 만족도 제고

둘째, 농업경영정보 D/B화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 및 농정 효율성 제고

셋째, 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신규 농업인 유입 증가

- 농업경영체 수 증가 사업 시행전) 3,814호⇒2020년 7월 현재) 4,202호, 10.2 ⇑

넷째, 전국 최초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례 타시군에 정책 파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인제군 사례 인접 시군 벤치마킹 : 춘천, 강릉, 홍천, 영월, 양구, 양양
- 영농자재 외지 구입비용 33%(약 30억 원)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KRILA 인포그래픽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은 무엇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대한민국 치명률 약 2.15%(질병관리본부, 7월7일 잠정치)을 가진 질병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공모전 개최

공모기간

2020.3.3(월) ~ 6.7(일)

공모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현가능한 제안 무엇이든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제 :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타인**의 **제안**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음

공모전 결과 및 분석

총 10주간 대한민국 국민 약 973건 등록
(중복 및 기간 미준수 제외)

매주 우수제안 3편 희망제안 10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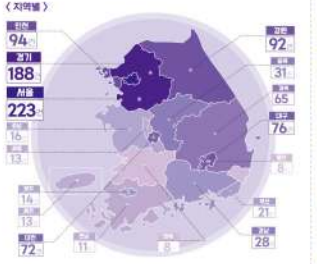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 실시

국민들은 얼마나 공모전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이디어 등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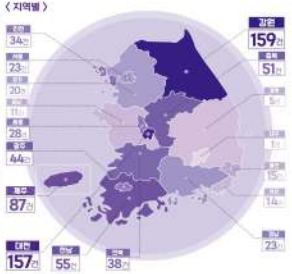
〈 지역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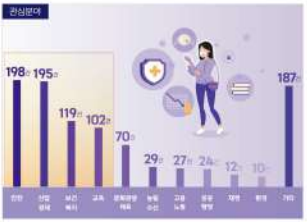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명 당 국민들은 공모전에 얼마나 참여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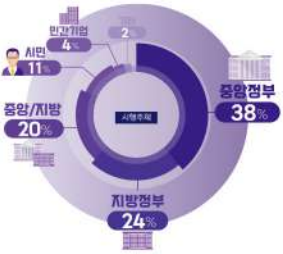
누적 확진자 대비 아이디어 등록건수 (2020.6.7. 00시 기준)

〈 지역별 〉



국민들은 어떤 분야, 무엇에 관심이 많았나요?





Top 5

총 10주간 **언급률** · 마스크, 지역, 사람, 생각, 사회





우수제안 -각 주차별 우수제안 중 랜덤 추출

1주차 · 데이터 트래픽 분석을 통한 밀집 지역 경고

2주차 · 지역 주도의 공공배달서비스정책

3주차 · 급식용 식자재 구매를 통한 기부 및 소외 계층 도시락 제공

4주차 · 굿굿즈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활성화 제안

5주차 · 긴급재난지원금 내고향 기부

6주차 · 지역 페이 및 모바일 상품권의 한시적 사용처 확대방안

7주차 · 결혼식 식권 대신 농산물 꾸러미 캠페인

8주차 · 코로나 Option (니랑 내랑 한 배를 탔다 아이가?)

9주차 · 체온에 반응하여 색상이 변하는 마스크 코 지지대

10주차 · 완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후 케어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아이디어 #공모전
#사회적거리두기 #공적마스크
#질병관리본부 #위기극복 #제안

자세한 수제제안 제안 및 공모전의 결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rila.re.kr/culture/regulation/regulation.jsp?pid=0)

[내용문의]

- 한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보센터장, 033-769-9879, sungmanj.an@krila.re.kr)
- 안혜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033-769-9837, cemetic17@krila.re.kr)
- 박정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033-769-9806, jdh0170@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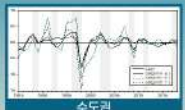
COVID-19 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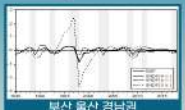
뉴노멀 지역相生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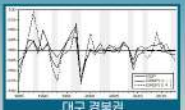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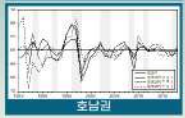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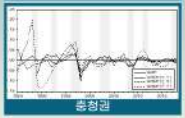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시도별 경기순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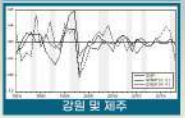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및 제주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기동향

소상공인 체감지수 전통시장 체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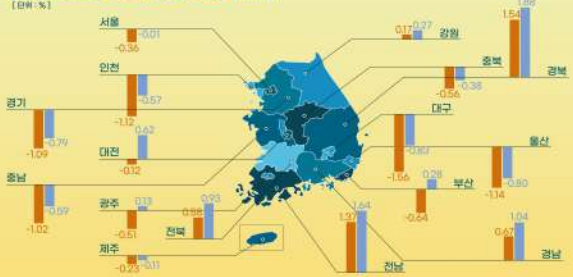
[기준시점: 2020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지역 GRDP성장률 전망

[단위 : %]

부정적 긍정적



KRILA 인포그래픽

코로나19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정책

중앙정부

(자료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6.1.))

실물피해 대책 ····· 32조 원

1단계	업종·분야별 긴급대책	4조 원
2단계	민생·경제 종합대책	16조 원
3단계	추경 예산 편성	11.7조 원

금융안정 대책 ····· 175조 원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135조 원+α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

추가보강 대책 ····· 46조 원

긴급재난지원금	14.3조 원
사회보험료 감면	0.9조 원
고용안정 패키지	10.5조 원
수출·벤처기업지원	10.1조 원

기타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의 경제적 충격 완화 및 실직 지원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비심리 활성화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지원

지자체 우수 시책 사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역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해외진출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방향

중장기적 시책 마련 필요

중앙(재원조달) **지방**(기술적 선제대응) 정부 간 역할 분담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시, **지자체 재원확보** 방안 강구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단·정기, 지원방식, 지원대상으로 시책을 구분]

디지털 비대면(Non-face-to-face) 문화와 사회 본격화



공공성 강화 ≡ 정부의 역할 증대



자급자족 경제 & 지역공동체 사회 강화



#포스트 코로나 #경제시책 #지역경제 #코로나19 #정부대응 #경제활성화

[자료출처]
이효(2020),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용문의]
이 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3-769-9875, hyo@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복을 위한 일탈

부캐를 아시나요?

트로트 차트를 휩쓴 '유산슬', 예능계를 접수한 '둘째이모 김다비', 잠잠해진 레트로 열풍을 다시 끌어올린 '싹쓰리'와 함께 2020년 미디어에 '부캐' 바람이 불고 있다. 2020년 트렌드 키워드 '멀티 페르소나'와 결을 함께 하며,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물론 우리 생활 속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부캐 열풍을 조명해본다.

'또 하나의 나'로 사는 부캐 전성시대

'부캐'는 게임에서 나온 용어로 원래 자신의 모습인 '본(本)캐' 외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부(副)캐릭터의 줄임말이다. 게임 세상에서 쓰이던 이 단어가 어느 순간 방송가를 휩쓸더니, 급기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핫' 한 부캐라면 '유산슬', '펭수', '싹스리', '김다비'를 꼽을 수 있다.

본업이 개그맨인 유재석, 가수인 이효리와 비가 '씩쓰리'라는 3인조 혼성그룹을 만들어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유산슬 역시 유재석의 새로운 자아로 신인 트로트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펭수는 EBS 연습생이라는 타이틀로 재치있는 입담과 댄스, 랩 등의 다양한 재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개그우먼 김신영도 직장인의 애환을 대변하는 '둘째이모 김다비'로 명활약 중이다.

대중은 이들의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알면서도 새로운 캐릭터에 몰입하고 환호한다. 펭수의 탈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려 하지 않고, 30년 차 방송인 유재석이 아닌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에 열광한다.

부캐의 또 다른 이름,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

부캐 열풍은 '멀티 페르소나' 이슈와 맞닿아있다. 멀티 페르소나는 여럿을 뜻하는 '멀티'와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소나'의 합성어로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자아를 꺼내는 이른바 '부캐 놀이' 또는 '멀티 페르소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안의 여러 자아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밀레니엄 세대의 등장,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전환,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출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등이 맞아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써온 '사회적 가면'을 벗고 새로운 자기 모습을 찾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2020년 잡코리아가 직장인 559명을 상대로 조사한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 조사'에서 직장인 77.6%는 "회사에서의 내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다. 회사에 맞는 가면을 쓰고 일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회사에서 요구·기대하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41.2%), "개인적이고 일만 하는 조직문화·분위기 때문에"(39.6%), "회사 동료들에게 평소 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35.9%)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에게 있어 멀티 페르소나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대사회 건강하게 살아남기

본캐는 오랜 시간 나와 함께한 역할이라서 쉽게 바꿀 수 없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바꿀 수 없고, 나의 직업도 쉽사리 바꿀 수 없다. 나의 성격도 마찬가지다. 현대인들에게 부캐 즉, '멀티 페르소나는 무료하고 지친 삶에 해방구 혹은 안식처일지도 모른다. 이들은 보통 퇴근 후가 되면 회사에 있던 자신과는 또 다른 자신을 만나러 간다. 대표적인 예로 여가를 활용해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거나 미술을 배우는 등의 취미생활을 들 수 있다. 취미로 시작한 요가를 발전시켜 요가 강사로 활약하거나, 작가를 꿈꾸던 이들이 작품을 쓰고 개인 출판에 도전하며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사례도 많다.

현대인들이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내 모습 중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끊임없이 복합적으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를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페르소나들을 긍정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또 다른 모습인 부캐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2020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는 6월 25일 목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2020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 연구원은 '포용성장과 지역의 협력시스템'을 대주제로, 3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세션을 구성·운영하였다.

- 일시 2020년 6월 25일~ 26일
- 장소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호텔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등

제2차 KRILA 자치포럼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6일 월요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제2차 KRILA 자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주)무하유의 김상연 프로가 '연구윤리의 이해와 적용 및 카피킬러 사용법'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일시 2020년 7월 6일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0년 7월 8일 수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각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와 자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는 김귀영(서울연구원), 김봉환(서울대학교), 남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라휘문(성결대학교), 마강래(중앙대학교), 박충훈(경기연구원), 여관현(안양대학교),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이재용(국토연구원), 이재원(부경대학교),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최충익(강원대학교)이다.

- 기간 2020년 7월 8일 ~ 9일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7월 10일 금요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센터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각 과제별 중간보고와 자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는 박병희 교수(순천대학교), 김상겸 교수(단국대학교), 오병기 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이다.

- 일시 2020년 7월 10일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제3차 포럼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7월 16일 목요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제3차 포럼(단장: 윤태범 원장)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분야별(행정 · 재정 · 기술 · 미래예측 · 교육 · 국토 등)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 전문가들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분야별 미래 예측과 비전수립 구조에 관한 발표에 이어 포럼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미래전략 및 세부과제 등을 논의했다.

- 일시 2020년 7월 16일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2020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17일 금요일,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 연구원은 단독 세션을 구성하여 3개 주제(지방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분석제도 도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에 대한 타당성 연구: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 기간 2020년 7월 17일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양구군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방문



양구군청에서 7월 22일 수요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양구군은 2016년 7월 26일 강원도 양구군청에서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협약(MOU)을 체결이후, 협약에 따라 양구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와 지역현안 컨설팅 지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등 행정 선진화 방안 제시,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 분야의 이론 및 정책개발 등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자문 및 연구 수행 등을 협력하고 있다.

- 일시 2020년 7월 22일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양구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혁신과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23일 목요일, 국회도서관 지하3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김두관 의원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K-방역과 정부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 2020년 7월 23일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김두관 의원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제4차 포럼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권한대행 김현호)은 8월 6일 목요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제4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분야별(행정 · 재정 · 기술 · 미래예측 · 교육 · 국토 등)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 전문가들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위원, 문병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위원의 지방자치 미래비전의 비전체계와 검토과제에 관한 발표에 이어 포럼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과제 등을 논의했다.

- 기간 2020년 8월 6일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월 18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관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김승남, 전라북도, 경상북도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인구위기와 대응방향: 인구이동 관점의 접근'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조정찬 숭실대학교 교수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표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일시 2020년 8월 18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김승남, 전라남도, 경상북도

KRILA 보고서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특례제도 연구 요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부연구위원 |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개정 「지방자치법(안)」을 계기로 기초단위의 다양한 유형의 특례지정에 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안)」에서는 기초단위의 특례를 인구 50만 이상과 인구 100만 이상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이다.

인구규모에 따른 차별적 자치권한 부여가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례시의 지정기준으로 인구 외의 유효변수 반영을 요구하고 있고, 인구 3만 이하의 군을 중심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부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개별적으로는 평창군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멤버십 가입과 관련하여 군의 법적 지위를 시로 전환하는 특례를 요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홍성군과 전라남도 무안군은 도청 소재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의 법적 지위를 시로 전환하는 특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기초단위의 특례유형을 분석하고, 지역유형별 맞춤형 특례제도의 적용 타당성 및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유형별 특례제도 요구사항의 분석과 외국의 기초단위 특례제도의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역맞춤형 특례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특례내용을 설계하고,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검토 결과, 기초자치단체 지역유형 19개를 대상으로 특례적용의 기준인 대상규모의 소수성과 행정요소의 특수성을 적용하여 특례시와 대도시, 대도시 특수지역, 일반시 특수지역, 군 과소지역, 군 특수지역, 자치구 특수지역 등으로 특례유형을 7가지로 구분하였다.

도출된 7개 지역유형에 대한 특례적용의 내용은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시와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기본특례인 사무와 조직, 재정 및 감독특례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대도시 특수지역은 기본특례와 더불어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부가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시의 특수지역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재정특례를 적용하고, 시 설치기준의 미충족 기능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의 시 설치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에 대한 단서조항의 특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군의 과소지역에 대해서는 기본특례의 재정특례를 부여하되 사무와 조직에 대해서는 부(一)의 특례를 적용하여 인구감소에 부합하는 행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법적지위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치구의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조직과 재정의 특례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의를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제도의 제도화를 다음의 두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과 같이 여타의 특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특례대상의 확대를 감안하여 일본의 사례와 같이 기초만을 대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다만, 인구감소와 지역단위의 요구 등에 비추어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특례대상의 지정추이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부연구위원 | 김봉균 부연구위원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재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기능배분, 세원배분 그리고 재정조정의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제적·재정적 요인들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요인들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① 기능배분 측면에서 현재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 간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동사무 등의 형태로 법령상 규정과는 다른 형태의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재원이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원에 비해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세원배분 측면에서 2018년 기준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세원배분 비중은 77.5:15.5:7.0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이 기초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더 높은 연평균 증가율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재정조정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비 보조율 및 시·도비 보조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비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역시 기준보조율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기준보조율이 준수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을 앞에서 살펴본 3가지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기능배분 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간 기능배분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하여 법률상에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중앙–광역–기초 간 기능배분과 관련한 계약 및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세원배분 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증가를 위해 세원의 편재가 큰 자치구세를 세원의 편재가 작은 특·광역시세와 교환하는 방안과 보편성과 충분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공동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조정 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중앙–기초 간 배분원칙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KRILA 보고서



3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민 부연구위원 |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2011년 OECD는 국가별 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하였다. BLI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된 측정체계인데,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OECD 국가 중 30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BLI에서 공동체(Community) 영역은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의 단일 지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공동체 영역은 전체 40개국 중 최하위인 40위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사회적 관계망의 구체적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공동체 영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 영역(사회적 관계망) 실태 분석 및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분석을 위해 우선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도시/비도시),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소득, 교 육, 연령, 거주기간 등)별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부문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계데이터인 서울서베이(2017)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부문 별 영향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마을만들기 등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업이 사회적 관계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관계망지표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각 '정책 부문화'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와 부문별 정책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공동체 영역의 지표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 및 종합적 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사한 사업 및 시책을 정책부문으로 복합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 관계망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관계망 영향력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부문별 우선순위 및 각 정책 부문별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조사 및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부문 강화, 국조실 주관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조사 시행,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지자체 행복조사 반영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넷째, 협력적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관계망공동체 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기반의 정비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영향평가 도입 및 시행, 사회적 연계 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률 기반 정비,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지원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는 여러 내외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로 2007년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그간 지방자치, 지방행정분야의 독보적인 저명 학술지로 자리 매김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지방행정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선도를 위해 더욱 겸허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논문주제** :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 지역발전 분야 등 지방행정관련 모든 분야
- **원고분량** : A4 25매 이내
- **원고마감 및 발간일정**

구 분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원고마감일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발간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마감일 이후에도 수시 접수합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JAMS) 투고 https://krila.jams.or.kr
- **문 의 처** : Tel_ 033-769-9825 | Fax_ 070-4275-2317 | E-mail_ local@krila.re.kr
- 기고논문은 「지방행정연구」 발간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합니다.
- 원고료 및 게재료는 없습니다.

※ 자난 논문검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지방행정연구" 코너 (http://www.krila.re.kr/?code=research&subp=0201) 를 참고하여 주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반곡동) Tel_ 033-769-9825 | Fax_ 070-4275-2317
© 2017 KRILA. All rights reserved



2020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사례 모집

2020.08.10(월) ~ 09.17(목)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5대 국정목표 우수 실천 사례를 모집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고민하고 땀 흘린 노력과 성과들을 응모해주세요.

모집내용 : 지자체의 국정과제 우수 실천 정책(사업)사례
모집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집기간 : 2020. 8.10.(월) ~ 9. 17.(목)
응모방법 : 참가신청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접수처를 통해 공문 제출
본 대 회 : 내용 및 국민온라인심사를 거쳐 11월 개최 예정
주 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세한 내용은 자치인재원 홈페이지(www. logodi.go.kr) 참조 및 기획협력과 홍보팀 문의(063-907-5049)

0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주권)

0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성장)

0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포용사회)

0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권발전)

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번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